

# “지방대가 지역 살린다”... 공동책임·성과연동 체계 도입

교육부, 'RISE' 시행령 입법예고 시·도지사-대학총장 공동위원장 성과평가 기반으로 예산 차등배분



교육부

/메트로신문 DB

지방대학을 단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면서, 대학 총장이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 혁신 정책을 설계하는 공동 책임 주체로 참여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동시에 성과평가와 예산 차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오는 8월 시

행될 예정이다.

### ◆지역 초광역 중앙 3단계 협력 체계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규제특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총 7장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우선 지역·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을 전체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규모와 유형 등을 고려해 위원을 균형 있

게 구성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회 내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문적 검토와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복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시도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부처 외에도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포함해 지역 고용과 정주 연계 정책까지 아우르는 범부처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 ◆성과평가 등 정책환류 '책무성 강화'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 환류 체계도 도입된다. 시행령은 '평가-환류-공개-예산 차등배분'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통해 시도의 책무성을 제

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시도 자체평가와 교육부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해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인다. 시행령(안)은 시·도지사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교육부도 별도 평가를 통해 결과를 확정·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규제특례 제도도 체계화된다. 시·도지사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 신청은 매년 9월에 받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다음 해 학기 시작 전에 관련 준비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규제특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 특례 부여 이후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동대문서 72억 규모 '작통 왕국' 적발

역대 최대 규모... 건물 한층 독점 운영 서울시, 현장서 총 1649점 압수



일반 가방진열로 위장된 비밀 창고 외부.

/서울시

동대문 관광상권을 기반으로 기업형으로 운영되던 위조 명품 판매 조직이 적발됐다. 압수 물량은 정품 기준 약 72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164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72억원에 달해 서울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868점, 지갑 653

점, 시계 128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도 확인됐다.

검거된 일당 2명은 10년간 대형 소품물 건물 한 층 대부분을 점유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형 매장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대량 매출을 올렸다. 매장 내부에는 외국 명품 잡지들을 비치해 두고 이를 단순한 전시용이 아닌, 지나가는 고객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로를 식별하는 은밀한 암호·신호로 활용했다.

/이현진 기자

## 서울 아파트 2월 실거래가 1.9% 상승

서울시, 동북·동남권 오름세 견인 주간지수·실거래지수 엇갈린 흐름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격이 한 달 전보다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가격 상승 흐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간지수와는 다른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90% 상승했으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5.7%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2월 실거래가격지수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

원에서 산출한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동북권과 동남권이 모두 전월 대비 2.35%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공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는 2월 당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월 실거래 전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실거래가격지수는 오히려 1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두 지수 간 상이한 흐름이 확인됐다.

특히 동남권의 경우, 주간 지수 상승률은 서울 전체보다 낮은 수준에서 둔화하다 2월 4주에는 하락 전환한 반면, 2월 실거래가격은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돼 서울 전체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착수

연천군·파주시·포천시 대상

정부가 2026년과 2027년 총 4곳의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후보지별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가나다 순)를 대상으로 20일부터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지방세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문화형,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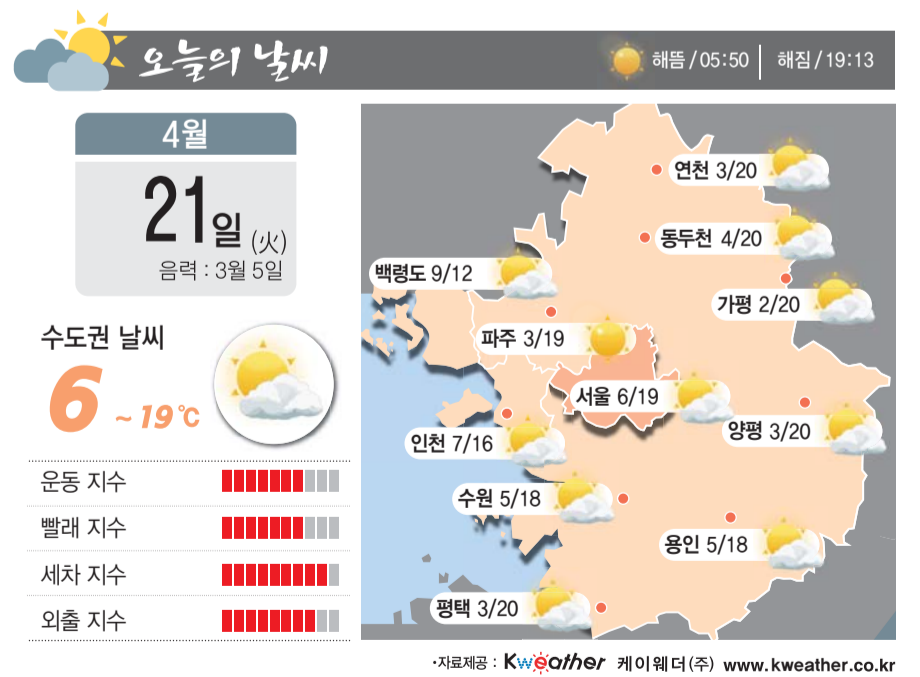
연구용역은 2026년 4월 20일부터 2027년 10월 19일까지 18개월간 추진되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다. 연구 범위는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

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의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계획 수립이다.

주요 과업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 및 지역 여건 분석 ▲산업·관광·투자 유치 등 특화전략 수립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마련 ▲단계별 개발사업 실행방안 도출 ▲정부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서 작성 등이다.

도는 5월 중 착수보고회를 열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해당 시·군과 정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이란 측, 화물선 나포에 “美군함 여러척 드론으로 타격” 주장  
▲트럼프 “이란 합의안 서명 안하면 나라 전체 날릴 것” 또 최후통첩 /사진 뉴시스

▲“기름값 폭등? 트럼프 책임” 美 중도층 53%도 등 돌렸다  
▲美, 드론으로 호르무즈 기리 제거중...“탐색 수일내 완료”

▲“美 나포 이란 화물선, 中 ‘미사일 고체연료 적재 거점’서 출항”  
▲트럼프, 이란 시위 희생자 유족에 친서...“끔찍한 비극 잊지 않겠다”